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

2026. 3.

기 획 예 산 처

목 차

1편. 예산안 편성지침 주요 내용	1
1. 재정운용 여건	2
1. 대내외 경제여건	2
2. 재정여건	3
2.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5
3. 4대 투자중점	7
1. 국가성장 패러다임 전환	7
2. 지방주도 성장	8
3. 모두의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9
4. 국민안전, 평화기반 구축	10
4. 재정운용혁신	11
1.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11
2. 참여·공개 확대	12
3. 지방 우대	13
4. 공정한 재정원칙 확립	14
5. 재정제도 개편	15
2편. 지출구조조정 기준 및 추진방안	16
3편. 분야별 투자방향 및 지출혁신계획	23

1편. 예산안 편성지침
주요 내용

I 2027년 재정운용 여건

1 대내외 경제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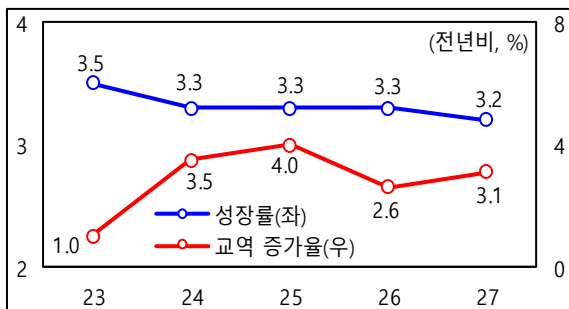
□ (대외) 국제 정세 변화 등 주요 이벤트^發 변동성 확대 소지

- 세계경제는 美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AI 투자 확대와 주요국 확장정책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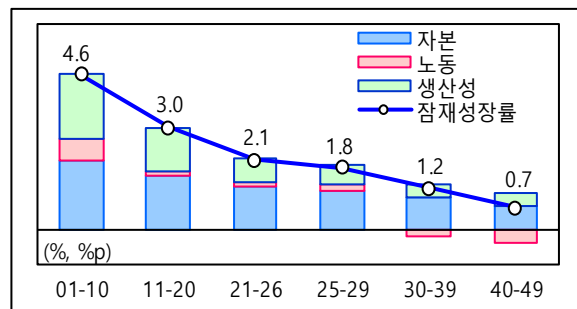
* '26→'27년 세계 성장전망(%): (한국은행^{2월})3.1→3.2 (IMF^{1월})3.3→3.2

- 그러나, 지정학적 갈등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 우려
 - 또한, AI·반도체·기후테크 등 국가 간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이 가속화될 전망

글로벌 성장·교역 전망(IMF)



잠재성장률 추이(한국은행)



□ (국내) 경기 회복세 유지, 다만 불확실성 속 구조적 과제 상존

- 우리 경제는 내수 개선, 반도체 공급능력 확충에 따른 수출 지속 등으로 경기 회복흐름 유지 전망

- 다만, 관세 등 주요국 정책방향, 지정학적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 상존

- 구조적 측면에서 인구 감소, 투자·생산성 정체로 잠재성장률 지속 하락

* '10년대 3%대 → '25년 1% 후반 → '30년대 1% 내외 → '40년대 0%대

- 아울러, 대기업·IT 편중 성장 속 노동시장 이중구조, 지역 간 격차, 소득·자산 양극화 심화 및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 필요

2

재정여건

□ [현황]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경기회복 마중물 역할 수행

- 경기 부진 심화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경기 회복 및 성장의 발판 마련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재정의 역할

- ① 소비쿠폰 지급 등 경기·민생 회복의 마중물 역할 수행, '26년 예산은 총지출을 전년대비 8.1% 확대하여 AI대전환, 신산업혁신 등 성장동력 확충에 투자
- ② 역대 최대 수준인 △27조원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저성과·낭비성 지출을 과감히 절감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
- ③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정철학 구현

-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성장모멘텀을 확산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 여건 내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지속 요구되는 상황
 - 나아가 “적극재정 → 성과제고 → 경제성장 → 지속가능 재정”의 선순환 구현을 위해 전략적 재정운용이 필요

□ [세입] 전반적으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나 불확실성도 상존

- 국세수입은 반도체 업황 호조와 법인세율 인상 등 세입 기반 확충 노력에 따라 추세적으로 개선될 전망
 - 다만, 중동 상황, 美 관세정책 등 글로벌 정세 변화에 따른 대외 여건·자산시장 변동 가능성 및 경기 하방 압력 등 불확실성도 존재
- 국세외수입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사회보험 가입자 수 확대 등에 따라 사회보장성 기금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
 - 아울러,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 및 과감한 신고포상제 도입 등 세입 확충을 위한 징수 노력도 강화
-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 제고를 통해서 세입기반 강화가 필요

□ **(세출) 국정과제, 구조개혁 지원 등 지출소요는 지속 증가**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과제 성과의 본격적 구현을 위해 충분한 재정투자로 뒷받침할 필요
 - 아동수당, 청년미래적금, 재생에너지 등 핵심 국정과제의 소요가 확대되고, 신규 추진 과제도 상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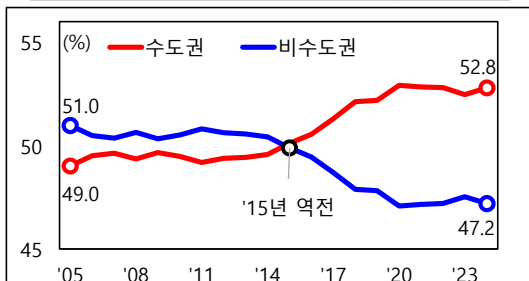
- 우리 경제가 직면한 5대 구조적 요인*에 대한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보다 선제적·적극적 대응이 긴요

* ①AI 대전환, ②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③탄소중립, ④양극화, ⑤지방소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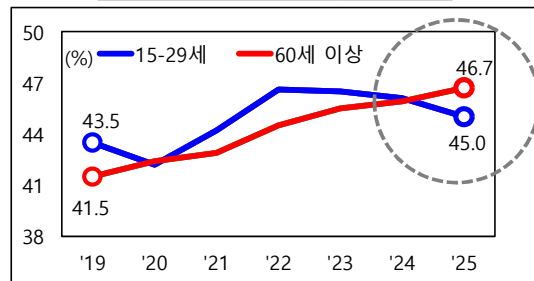
- AX·GX 등 산업대전환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산업생태계 혁신 및 개편 지연 시, 전반적인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

- 지방 소멸, 저출생·고령화, 세대·계층·산업간 양극화 등 문제가 고착화되기 전 반전의 모멘텀 마련 필요

수도권·비수도권 GRDP 비중(데이터처)



연령별 고용률 추이(데이터처)



- 자국우선주의, 첨단산업 경쟁 심화 등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및 중동 상황, 공급망 등 대외정세 변화로 새로운 재정수요도 대두

-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연금·의료 등 복지소요 확대, 이자지출 부담 등 의무지출 규모는 지속 증가할 전망

* 의무지출(조원, '25~'29 중기계획) : ('25)365.0 ('26)388.0 ('27)415.1 ('28)441.3 ('29)465.7

⇒ 성장동력 확충, 구조개혁 지원을 위해 ❶고강도 지출구조조정과 ❷“적재적소·불요불급” 원칙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배분 필요

II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 이재명 정부의 성장패러다임 대전환으로 새로운 시대를 구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

1 전략적 자원배분에 기반한 적극적 재정운용

- 우리 경제의 대전환·대도약을 뒷받침하고, 국정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재정 기조 유지
-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과감한 제도개선과 성과 기반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전략적 자원배분 프로세스 구축

2 성장동력 확충, 구조개혁 지원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

- AX·GX 등 산업생태계 변화에 대응하여 초혁신경제를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 육성으로 국가 성장의 엔진 확보
- 수도권으로부터 거리, 지역발전 수준 등을 고려한 지방우대 지원으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주도 성장으로 대전환
- 저출생 반등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기회와 과실을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세대·산업·계층간 양극화 완화
-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 및 자주국방 기반을 구축하여 국민 행복이 담보되는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

3 성과·참여를 통한 재정운용혁신으로 국민주권예산 실현

- 모든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통해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편
- 최초로 시민단체의 의견을 공식 청취하고, 일반국민·지방정부와 소통을 강화하는 등 예산운용 전 과정에 민간의 참여 대폭 확대

목표 새로운 시대로 **대전환**, 국민이 체감하는 **대도약**

기본 방향

- **성장동력** 확충, **구조개혁** 지원 등 **적극적 재정운용**
- **적재적소·불요불급 원칙**에 따른 **전략적 재원배분**

4대 투자 중점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X 본격 추진 ○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 K-GX 등 탄소중립 투자 ○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 성장 	지방주도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성장거점 구축 ○ 교육·교통·의료 등 인프라 개선 ○ 지역을 살리는 K-컬처 ○ 통합 지방정부 파격 지원
	모두의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트업·소상공인 중심 창업생태계 ○ 청년 회복·경험·성장 지원 ○ 저출생 대응, 복지사각지대 해소 ○ 사회연대경제로 포용적 통합 	국민안전, 평화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이 기본인 사회 ○ 자주국방 기반 강화 ○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 국익중심 외교·한반도 평화공존

재정 운용 혁신	지출구조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수준 절감 ○ 시민사회 의견수렴 대폭 확대 등 투명성 제고
	참여·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전 과정에 국민의 실질적 참여 보장 ○ 사업설명서, 통계자료 등 재정정보 공개 확대
	균형성장 뒷받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우대원칙 본격 적용 ○ 지방정부의 자율성·책임성 제고
	공정한 재정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자 부담 및 이익공유 원칙 강화 ○ 부당이득 환수 등 공정경제 실현 뒷받침
	재정제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타당성조사·민간투자 등 재정투자제도 개선 ○ 특별회계·기금의 신설·정비 등을 통한 효율적 자금운용

Ⅲ 4대 투자중점

① 국가 성장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성장동력 확충

①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AX 본격 추진

- 업종별 제조AX 실증·보급 등 전 분야의 AX 추진 가속화 및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지속 확충으로 혁신생태계 조성
- 공공 AX 내실화, 데이터 통합관리·공동활용을 통해 사업 효과를 제고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국민체감형 AI 확산

② 첨단전략산업 집중 육성

- 국민성장펀드 조성 확대, 반도체특별회계 신설로 안정적 투자 여건을 확보하고, 기술 실증·판로 확대 등 산업경쟁력 제고
- 유망산업 글로벌 진출,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신통상전략을 통한 수출·통상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 및 세계시장 개척 지원

③ K-GX 등 탄소중립 투자 확대

- 2035 NDC 이행과 신성장동력으로 탄소중립 생태계 구현을 위한 K-GX 전략 추진을 지원하고, 자발적 탄소시장 육성
- 사회 전반의 녹색 대전환을 위해 AI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는 등 전력·산업·인프라에 집중

④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 중장기-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으로 투자하고, 콘텐츠 기업의 AI 활용 기반을 강화하여 세계를 이끄는 K-콘텐츠 제작 지원
- 권역별 K-컬처 허브 구축을 통한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 수립 및 문화 분야 인력·인프라 확대로 경쟁력 강화

②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등 지방주도 성장 뒷받침

① 권역별 전략산업에 기반한 지방성장거점 구축

- 지역별 주력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AX 연구·실증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클러스터·전력망 등 산업기반 지원
- 남부권 반도체 벨트, AI 실증도시, RE100 산단 등 지방 중심의 첨단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인 강화

② 교육·교통·의료 등 지역 인프라 강화

- 거점국립대를 교육·연구의 허브로 집중 육성하고, 산업 수요 중심 교육과정 확대로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뒷받침
- 권역간 연결 강화를 위한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을 확충하고, 행정수도 조기 완성도 차질 없이 이행
- 지역필수의사제 확대, 응급의료체계 개선 등 의료서비스 강화 및 농어촌 기본소득 지속 추진으로 정주여건 개선

③ 지역을 살리는 K-컬처

- 지역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공연장·미술관 등 인프라 확충 및 우수 공연·전시 지방 순회 등 콘텐츠 확대
- 반값 여행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지역관광 활성화, 문화상품 개발 등으로 수도권에 편중된 관광객을 분산하여 지역관광 붐업

④ 통합 지방정부에 파격적인 지원 추진

- 연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충분한 재정 확충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이전도 적극 지원
- 권한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여 지방분권 뒷받침

③ 모두의 성장을 통한 양극화 구조 개선

① 스타트업·소상공인 중심 창업생태계 활성화

- 모두의 창업*, 창업도시 조성, 로컬창업 등 혁신생태계 구축과 초기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 열풍** 뒷받침
 - * 단계별 보육·경연을 통해 유망 예비 창업자 선별 후 사업화 자금 등 지급
- AI 전환, 판로 확대, 신시장 수출 등 **중기·소상공인 도약**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위기 소상공인의 재취업·재창업** 지원

② 청년층 회복·경험·성장 지원 강화

- 쉬었음, 구직·재직, 고립은둔청년 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근속유인 제고
- 주거·자산 형성 등 자립 기반 마련을 통한 **청년층 도약** 뒷받침

③ 저출생 대응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저출생 반등 모멘텀**을 이어 나가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아이돌봄 및 육아휴직 사각지대 지원 등 **제도 내실화**
- 장애인·한부모 등 **취약계층과 위기가구**를 촘촘하게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도록 통합돌봄** 지속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④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포용적 사회통합

- 고용 창출, 양극화 완화, 공동체 신뢰 회복 등 다양한 경제·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혁신모델** 발굴·확산
- 협동조합·사회적기업을 돌봄·환경정비·주거 등 **공공서비스의 공급 주체**로 육성하여 포용사회 기반 구축

④ 국민 행복이 담보되는 안전·평화 기반 구축

①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사회

- 대-중소, 원-하청간 상생협력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스마트 안전장비·설비 보급 확대
 - 산재노동자의 생계·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산재보험제도를 개편하고, 취업 지원 등 신속한 사회복귀도 뒷받침
- 첨단장비 확산을 통해 재해·재난 대비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긴급 생계비 지원 등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 도모

② 자주국방 기반 강화 및 스마트 강군 육성

- 최첨단 무기체계로의 전환 등 방위력 강화 투자를 지속하고, 수출 전주기 지원으로 K-방산 생태계 구축
-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한 상비병력 재구조화를 지원하는 한편, AI·드론 등 첨단 무기 교육을 통한 스마트 정예 강군 양성

③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 글로벌 정세 불안 등에 대비하여 공급망 핵심 전략품목의 비축, 수입선 다변화 등 차질없는 수급 안정을 지원
- 수출·통상 전략의 전환을 통해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대미 전략적 투자 등 통상 현안의 차질없는 대응에도 충실

④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한반도 평화공존

- ODA를 국익 기여 사업으로 재편하고,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을 통해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으로 전환

IV

재정운용혁신

① 철저한 성과 기반의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추진

- (원칙)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구조조정 추진
 - ⇒ 부처별 절감 재원은 각 부처 핵심과제에 우선적으로 재투자
 - (재량지출) 저성과·낭비성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연례적 행사·홍보 등 경상경비도 지속 절감하여 15% 감축
 - (의무지출) 10% 수준을 절감하고, 제도개선 및 입법조치계획 등을 마련하여 각 부처 예산안 요구서와 함께 제출
 - (폐지) 전체 사업 수의 10% 수준을 폐지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최소화
- (프로세스 개편) 지출구조조정을 위한 객관적인 세부 기준 마련·공개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규모 사업까지 세심하게 정비
 - 지출효율화 TF 상시 운영으로 의무지출·다부처 협업과제 등 핵심 제도개선 과제*의 구조조정 방안 수시 검토
 - * (예) 아동 현금성 지원 개편, 국고보조사업 관리 강화, 농업 정책자금 정비 등
- (성과관리 강화) 각부처-재정당국으로 이원화된 현행 성과관리 제도를 부처·민간 합동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로 일원화
 - 결과를 체계적으로 환류*하고, 사업별 예산안 반영 실적과 평가보고서는 대국민 공개
 - * 감액 대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10% 감액하여 요구
- (시민사회 참여) 전문가·시민단체·연구기관 등 시민사회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지출구조조정 전반에 민간의 참여 확대

② 참여·공개 확대로 국민 중심의 재정운용으로 전환

- (참여예산)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재정운용 전 과정에서 적극 활용
 - 국민참여예산 플랫폼(www.mybudget.go.kr)을 통해 접수되는 지출효율화·국민제안사업은 예산안 편성시 **최우선 검토**
 - 재정집행·결산·제도개선 등 나라살림 전반에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고, “**찾아가는 국민제안**”으로 현장 밀착형 방식도 추진
- (현장소통) 각 부처는 민생·산업 현장방문,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청취한 **국민의 의견을 예산안 요구서에 반영**
 - 시민단체·전문가·정책수요자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예산편성·집행·제도개선 등 재정 전반의 의견 수렴
- (자료 공개 확대)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설명자료 공개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지출구조조정 내역도 지속 공개
 - * (현행) 세부사업별 예산규모 등을 국회 확정 후 연 1회 간략하게 공개
→ (개선) 산출근거·평가결과 등을 추가하고, 정부안 마련 후 추가 공개
 - 예비비 사용계획서, 집행계획 변경 사유도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 (통합플랫폼) 예·결산, 사업설명자료 등 공개 및 맞춤형 콘텐츠 제공을 위해 원스톱 재정정보 공개플랫폼인 “**모두의 재정**” 구축
 - * 현재 운용 중인 대국민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을 개편·고도화
→ AI 기반 통합 재정정보공개플랫폼인 ‘모두의 재정’ 구축
 - 중앙·지방정부 및 교육청 등이 별개로 운영 중인 시스템간 연계를 강화하여, “모두의 재정”에서 **정보 통합 열람·활용**

③ 지방우대 및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로 균형성장 뒷받침

- **(지방우대)** 수도권으로부터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재정사업 지방우대원칙* 본격화**
 - * '26년 예산에는 아동수당 등 7개 사업 대상 시범 실시
→ 비수도권을 3단계로 구분하여 수혜금액 인상, 자부담 인하 등 지방우대
 -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지역발전 수준, 인구소멸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역별로 우대 지원
 - 각 부처는 적용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예산안 요구
- **(초광역계정)** 지방정부 주도로 기획·발굴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초광역계정(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內) 신설**
 - **권역별 산업경쟁력 강화,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도 이관하여 자율성 제고
 - * (예) 문화·복지 서비스 공동 이용, 클러스터 패키지 지원 등
- **(포괄보조)** 지역 여건에 맞게 스스로 편성하는 **포괄보조를 지속 확대***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권한 강화
 - * (규모) '25년 3.8 → '26년 10.6조원, (사업수) '25년 47 → '26년 121개
- **(지방소멸대응기금)** 시설 조성사업 위주에서 인구 유입 효과가 있는 제도·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원 범위 확대**
 - * (예) 앵커기업 유치,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반값여행 등 지역관광 활성화 등
- **(지방정부 의견수렴)** **지방재정전략협의회***를 신설하고, 각 부처도 예산안 요구서 마련시 지방정부와 **소통 강화**
 - * 기획예산처장관(주재), 관계부처 장관, 시·도지사로 구성

4 수익자 부담 · 이익공유 등 공정한 재정원칙 확립

- (재정부담 원칙) 국립시설 입장료·이용료 현실화 등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화
 - 민간 대비 사용료가 현저히 저렴하거나 환경 변화에도 장기간 낮게 유지된 부담금의 적정수준 현실화 추진
 - * (예) 출국납부금, 박물관·고궁·왕릉 입장료, 국립시설 이용료 등
- (이익공유) 예산 등 정책적 지원의 혜택을 받은 기업의 수익 일부를 국민에게 환류하여 모두의 성장 뒷받침
 - 전략수출금융기금, 서민금융안정기금 등 수혜기업의 기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신설로 이익공유 제도화
 - * (예) 수출금융 정책 수혜기업 기여금, 금융권의 정책서민금융 출연 확대 등
- (부당이득 환수) 범죄수익 등은 철저히 추징하고, 탈루소득·체납세액에 대한 징수 노력도 강화
 - 부정행위 적발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합기금 신설
 -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으로 세입 기반 확보 및 일자리 확충
- (재정누수 방지) 국가의 적극적 구상권 행사*를 통해 미회수 금액을 반환받고, 채권관리·제재 강화 등 실효성 제고
 - * (예) 공적자금 지원, 신용보증 대위변제,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대집행 등
 - 부정수급 환수 및 시스템 개편을 통한 철저한 보조금 관리

5 재정제도를 개편하여 효과적인 재정운용의 틀 마련

- (예비타당성조사)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개선, 지방주도 성장 등을 적기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 R&D 예타 폐지로 첨단기술 패권 경쟁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평균 사업비가 크게 상승한 SOC 사업의 기준금액 상향 추진
 - 모든 건설사업에 대해 균형성장효과 항목을 신설하고, 인구감소 지역의 지역균형 가중치를 상향하여 **지역 투자 활성화**
 - (민간투자) 전통적인 SOC에서 벗어나 데이터센터, 전력망 등 **신사업에 민자를 도입**하고, 운영형 등 **새로운 사업방식 활성화**
 -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도입 및 생활 SOC 확대를 위한 BTL 특별인프라 펀드 신설
 - 인구감소지역 민자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역업체의 참여 유인 제고 등으로 지방 민자사업 촉진
- * (예) 민자적격성 종합평가(AHP)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 최초제안자 추가가점 신설 등
- (자금운용 효율화) 재정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 **특별회계·기금을 신설·정비**하고, 기금 여유자금은 체계적으로 운용
 - 지역필수의료, 반도체, 불공정거래 피해 지원 등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기금을 도입**하고, 회계·기금 **통합운용방안**도 강구
 - 기금 여유자금에 대한 **벤처투자 인센티브 강화**로 국내벤처·코스닥 등 혁신성장 분야 투자 유도
 - (중장기 전략 연계) 기획과 예산 간 연계 강화를 위해 부처별 **정책 및 계획 마련** 시 재정당국과 **긴밀하게 협의**
 - 각 부처는 마련된 중기계획의 틀 내에서 재원 소요 총당

2편. 지출구조조정 기준 및 추진방안

I. 지출구조조정 일반

1 지출구조조정의 필요성 및 원칙

□ (필요성) 핵심사업 투자 재원 마련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 국정과제 및 5대 구조개혁 대응* 등 재정이 해야 할 일에 적극 투자하기 위해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한 재정 확충 필요

* ①산업경쟁력 저조, ②저출생, ③탄소전환, ④양극화, ⑤지역소멸

- 기존 지출의 성과 및 우선순위 재검토를 통해 전략적 자원배분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 정책 신뢰성 확보

※ OECD - 지출 점검(Spending review)의 필요성(Government at a Glance 2025)

⇒ 기존 지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

* ①지출수준 관리 + ②재정 재배치를 통한 새로운 우선순위 반영 + ③정책 효과성 향상

□ (원칙)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감축·폐지 또는 근본적 구조개선 추진

⇒ 부처별 절감 재원은 각 부처 핵심과제에 우선적으로 재투자 원칙

- 재정지출의 성격(의무·재량, 사업비*·경상경비**, 한시·계속 등)과 무관하게 **쏠부처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지속여부 및 규모 재검토

* 사업의 수행에 직접 투입되는 지출(민간·지방정부 이전, 자산취득·운용 등 관련)

** 조직을 유지·운영하기 위해 투입되는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공공요금, 수용비 등) 및 행사·홍보비 등 매년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재검토 결과, 성과가 미흡하거나 효율이 낮아도 관행적으로 지원해왔던 사업은 강도 높은 규모 조정 및 제도개편으로 환류

- 특히, 한시·일몰 사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반복적으로 기한을 연장해 온 사업은 원칙적으로 종료

2 지출구조조정의 정의

- ① 유사중복·집행부진 사업을 정비하거나 사업간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의도적 절감** 노력을 통한 **비효율적 사업 감축**
- 또는, ② **사업 구조를 개편**하여 지출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조치

구분	예시	
포 함	① 당해연도 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의 사업계획 재검토 등을 통해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조정 ② 집행이 부진한 용자 자금을 축소하거나, 정책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자금 공급대상을 전환하는 등 용자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③ 연례적으로 사업계획을 연장하여 추진해 왔으나 부처의 의지로 종료시킨 경우 * (예시) 장비 도입이 완료되는 경우 새로운 장비 도입을 관행적으로 지속해 왔으나, 부처의 의지·노력에 의해 종료시킨 경우	
미 포 함	○ 당초 사업계획 등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거나, 부처의 의도적 절감 노력 없이 예산이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경우	
	< 자본적 지출 >	< 경상적 지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계획된 시설물 구축 또는 장비 도입이 완료된 경우 ■ 정보화시스템 구축, ISP·BPR 완료 ■ 기타 총사업비가 정해진 사업의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성 조사·행사 등의 미개최 연도 도래에 따른 조사·행사 예산 미반영 ■ 환율·공공요금 등의 변동에 따라 자연적으로 감액되는 경우 ■ 수입대체경비 등 세입에 연동되는 지출 항목이 감액되는 경우

3 지출구조조정 방식

- ① (제도개선)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거나 지원조건을 합리화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 인구구조 변화 반영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지원조건 재설계, 급여수준 조정 등 의무지출 구조·체계 효율화
 - 특정 세출 사업과 직접 연계되는 각종 법정출연금 및 부담금의 비율 상향 등 세입 구조 개선을 통한 지출 절감
- ② (평가·지적) 정부의 각종 정부 사업평가(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외부기관(국회·감사원 등) 지적 반영에 따른 감액
- ③ (민간·지방정부 자원분담) 민간·지방 이양 및 분담비율 확대
 - 정부 지원이 민간을 구축할 우려가 있는 사업 등을 정부 → 민간 추진으로 전환하는 경우
 - 지역별 수요·여건을 반영할 필요성이 커 지방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업의 지방 이양
 - 민간·지방정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자원분담 비율 확대
- ④ (유사중복) 지원목적·내용·대상 등이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역할을 재분담하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우
- ⑤ (집행부진) 연례적 불용사업 등 집행부진 사업을 실집행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 수준으로 조정하는 경우
- ⑥ (우선순위) 정책여건 변화 반영 및 목적이 이미 달성된 사업의 규모 재검토 등 사업간 우선순위를 감안한 예산 절감

- ⑦ (공공부문 경비) 공무원·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경비 절감
 - * 업무추진비, 여비, 운영비 등
- ⑧ (행사·홍보성 경비) 성과가 미흡한 행사·홍보 개최 횟수를 감축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매체로 행사 및 홍보 방식을 전환하는 경우
- ⑨ (관행적 경상경비 지원) 사업 성과에 대한 재검토 없이 연례적으로 지속(예: 3년 이상)되어 온 경상경비 지원을 감축하는 경우
- ⑩ (기타) 부처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①~⑨ 이외의 사유로 지출 절감 조치를 추진하는 경우

4 지출구조조정 실적 산정

□ (단위) 원칙적으로 세부사업 단위로 지출구조조정 실적을 산정, 불가피할 경우 내역사업 단위로 실적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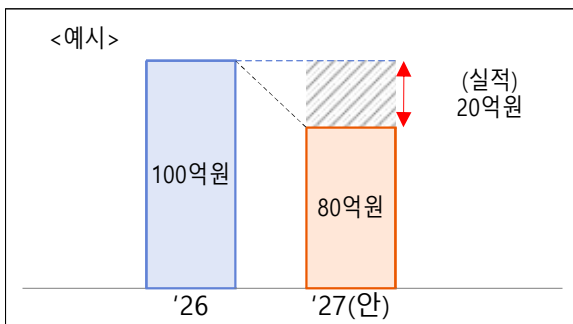
□ (추계방식) 원칙적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절감 규모*로 추계

* t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실적 = t-1년 본예산 - t년 예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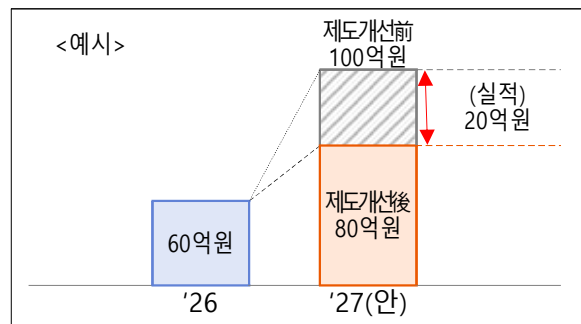
○ 의무지출 등 제도개선 유형의 경우, 전년 본예산 규모 대비 증액 여부와 무관하게 제도개선前 대비 절감 규모*로 추계

* t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실적 = 제도개선前 t년 소요 - t년 예산안(제도개선後 소요)

<재량지출 실적 추계>



<의무지출 실적 추계>



□ (결과 산정)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규모 + 폐지 사업 개수

Ⅱ. '27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추진방안

1 기본방향

-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 필요성** 등을 감안, '27년 예산안은 '26년보다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추진
 - * (대통령 말씀)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국가재정이 매우 취약하다.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자원을 확보해야 한다."(25.8.13, 나라재정 절약간담회)
-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안에 충실히 환류하고, 과감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지출구조조정의 질적 수준 제고**
- 일반국민,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 **재정 쇼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

2 추진목표

- (규모) 필수 소요 제외 **재량지출 15% + 의무지출 10%** 수준 감축
 - ※ 과거목표: ('15)600개 사업(3년간), ('16)보조사업 수 10%, ('17~)재량지출 10%(예와: '19년)
- 특히, **의무지출**의 경우 구체적 **제도개선 및 입법조치 계획** 등을 마련하여, 각 부처 예산안 **요구서와 함께 제출**
- (사업수) 지출구조조정 대상 **내역사업 수의 10%** 수준 **폐지**

3 추진방안

- (성과평가)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 성과를 점검하여 **저성과·낭비성 사업**을 발굴
- 예산 요구시부터 **평가결과 충실히 반영** → '감액'인 사업은 전년 대비 **10% 이상 감액** 및 '폐지'인 사업은 **미반영 원칙**

- (제도개선) 민관 합동 지출효율화 TF에서 발굴한 과제를 우선 검토하여 '27년 예산안 요구시 반영
 - 이외에도 중장기 지출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의무지출·다부처 협업과제 등 제도개선 사항 적극 발굴
- (민간 참여) 부처별 지출구조조정 방안 마련 시, 국민·전문가 등 민간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국민 중심 재정운용으로 전환
 - (국민참여예산) 플랫폼(www.mybudget.go.kr)을 통해 접수되는 지출효율화 관련 국민 제안을 최우선적으로 반영
 - (시민사회 참여)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등과의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안된 지출효율화 방안도 중점 검토
 - 통합 재정사업 평가단 구성시 시민사회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국민 눈높이에서 낭비성·비효율 사업 발굴 및 절감
 - 지출효율화 TF 등 제도개선 과정에서도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시민단체 및 학계 등의 역량을 활용하고 국민 체감도 제고
 - (기타) 이외에도 각 부처에서 별도 민간의견 수렴절차(현장방문, 간담회 등)를 적극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 지출효율화 방안 마련

4 인센티브 방안

- 지출구조조정 우수부처 선정 및 개인·부처·국민 포상 추진
 - (개인) 지출효율화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연말 기획예산처 장관 명의 유공자 표창 수여 및 예산 성과금 지급
 - (부처) '27년 예산안 편성시 지출구조조정 우수부처에는 핵심사업의 투자재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보상체계 확립
 - 지출구조조정 정량적 실적 외에도 부처 협업 여부, 중장기 지출 효율화 효과, 과제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 (국민) 플랫폼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출효율화 아이디어를 제시한 국민에게는 최대 600만원 상당의 포상 실시

**3편. 분야별 투자방향 및
지출혁신 추진계획**

1. 중점 투자방향

- ◇ 양극화 문제 대응을 위한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매트** 구축
- ◇ **저출생 반등 모멘텀**을 이어가고 **어르신 돌봄·일자리** 확충
- ◇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지역·필수·공공 의료** 확충
- ◇ 국민선호도 높은 양질의 주택 공급으로 **서민주거 안정** 지원

- **(사회안전매트)** 복지 사각지대 발굴, 장애인·한부모·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 심리 안전망 구축 등 기본이 튼튼한 사회 뒷받침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근로취약계층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하고 누구나 기본 생필품 지원받는 **그냥드림코너** 전국 확산
 - 발달장애인·장애아동 **돌봄 및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와 한부모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 보건권을 위해 생리용품 지원
 - OECD 1위 자살률 대응을 위해 **정신·심리 고위험군**을 집중 지원하고, 지원대상도 고독사에서 사회적 고립으로 확대
 - 보편급여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지급**하고, 자산조사 기반 선별 급여는 신청 간소화 및 자격심사 자동화 등 **단계적 개선** 추진
- **(저출생 반등)** 합계출산율 상승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동수당, 아이돌봄, 일가정양립, 주거 지속 지원
 -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단계적 상향('30년까지 만 13세 미만)하고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
 - 취학아동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 **(고령화 대응)** 베이비붐세대 노인 편입, 고령화 속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돌봄, 맞춤형 소득보장 지원
 - * 의료·요양 지출이 집중되는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 확대
 -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지원
 - 돌봄인력 부족 및 돌봄의 사회적 비용 급증에 대비하여 돌봄 로봇 등 피지컬 AI 개발·보급 지원
 - 일하고 싶은 어르신을 위해 **노인일자리** 및 민간고용지원 확대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 국민중심 의료서비스 확립
 -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Hub & Spoke)를 구축하고, 현장 이송부터 치료까지 응급의료체계 개선
 - 지역의사제 정착을 위해 의대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확대하여 장기근무 인력 확충
- **(주거안정)** 살고 싶은 공공·민간주택 공급 및 주거안전망 구축
 - 공공청사·유희부지 등을 활용하여 국민 선호도가 높은 중형평형 (60~85㎡)·역세권·우수입지 중심으로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청년 주거지원 강화**
- **(보훈예우)**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의 가치를 공유하는 보훈환경 조성
 - 독립·참전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범위 단계적 확대**, 국·내외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및 유엔참전국간 교류·협력 활동 강화
 - 두터운 **보훈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 병원 지정 및 의료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훈병원 시설개선 투자 지속

2. 지출혁신 추진계획

- ◇ 의무지출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인구·사회구조변화, 제도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개편방안을 마련
- ◇ **수요자 중심 연계·통합**을 통해 사업 효과성·체감도 제고
- ◇ **중앙·지방정부·민간 간 역할 분담**으로 지속가능성 확보

- **(제도개선)** 인구·사회구조 변화와 공공부조·공적연금 등 복지 제도간 정합성 등을 고려한 개편 추진
 - 기초연금은 노후소득 보장,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편 방안 검토
 - 생계급여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제도 정합성, 탈수급 인센티브, 거시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산정기준 합리화
 - 기타 사회보험·공공부조 등도 반복·장기·부정수급 및 과다이용과 같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 **(전달체계)** 지원대상·내용·방식이 유사한 사업은 **수요자 중심 연계**
 - **아동에 대한 현금성 지원**(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사업은 효과성·체감도 제고를 위해 통합 지원 추진
 - 국민들이 복지서비스를 더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하고 현장 서비스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달체계 간 연계 강화
- **(역할분담)** 재정-사회보험, 중앙-지방 간 합리적 역할 조정
 -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등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인프라·인력확충 등에 필요한 지원은 재정으로 뒷받침
 - 지역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건립은 지방정부 역할 확대
- **(시범사업)** 전문기관(예: KDI, 조세연)이 참여하여 복지분야 **시범사업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한 후 **본사업 추진**

노동 · 일자리 부문

1. 중점 투자방향

- ◇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적극적 고용안전망 구축**
 - ◇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일터 조성**
 - ◇ 차별과 배제 없는 **노동권리 보호** 및 **노동시장 격차해소** 투자
-
- **(고용안전망)** 경활인구 감소, 은퇴계층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AI 등 산업 대전환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구축
 -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 및 상황을 고려한 일경험·직업훈련, 중장년 경력 설계·전환 지원 등 맞춤형 노동시장 진입·복귀 촉진 방안 마련
 - 청년 대상 선제적 발굴체계 구축 및 청년이 원하는 다양한 구직활동 참여기회 보장을 통한 체감도 향상
 - AI 신기술 전환에 발맞춰 노동시장 진입-활동-전환 **전주기별 노동자 역량 강화** 및 **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투자
 - 산업전환·탄소중립에 따른 일자리 영향을 분석하고, 취약부문 노동자 대상 찾아가는 컨설팅 제공 및 훈련부담 완화 추진
 - 취약계층의 안정적 구직·재취업을 위한 **생계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으로 **사각지대 없는 고용안전망** 구축
 -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급여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 사업들에 대한 국민 접근성 향상 및 제도간 연계성 제고
 - 지자체별 특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 주도형 고용정책** 수립 지원 및 **지역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등 지역일자리 자생력 강화

- **(안전한 일터)**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산재예방·보호 및 근로시간 단축 투자 확대**
 - 위험 격차 없이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소규모·고위험 사업장 **산재예방 시설·장비 투자 확대** 및 다양한 위험요인 대응 강화
 - 신산업 확산, 기후위기 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 예방·대응을 위한 환경변화 분석 및 투자 확대
 - 산재노동자의 생계 보호 및 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산재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취업지원 등 사회복지 지원도 지속
 - * 법정재해조사기간이 도과되는 경우 '요양·휴업급여' 우선 지급 추진 등
 - **자발적인 근로시간 단축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야간·교대제 노동자 등의 건강권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추진
- **(노동기본권)** 소상공인·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권익보호 체계 구축 및 노동시장 격차 해소** 촉진
 -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는 노동권리 보호 및 **차별 없는 노동문화 조성** 지원
 - 소규모 영세사업장 종사자, 임금체불·장애인·외국인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들의 권익향상 및 대지급금 등 생계 지원 강화**
 -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적극 발굴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일자리 처우개선 병행** 추진

2. 지출혁신 추진계획

- ◇ 재정투입 대비 효과성이 낮고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편 추진**
- ◇ **저성과·유사중복 직업훈련을 효과성 높은 사업 중심 재구조화**

- **(도덕적 해이 최소화)** 재정투입 대비 재취업 촉진 등 효과성은 낮은 반면 **부정수급·체납**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의 실효성 제고
 - 각종 수당·장려금 사업의 반복·부정수급 현황에 대해 분석 후 수급요건 강화 등 적극적 제도개선 추진
 -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대상으로 AI 등을 활용해서 사전요건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도 강화
 - **체불임금 대지급금** 등을 상습·고액 체납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국세청 등과 연계한 변제금 회수 강화
 - 시설·장비투자 지원 사업의 경우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조건 부과(ex. 기존 위험장비 폐기) 등 추진
- **(직업훈련 효율화)** 부처별로 산재한 **저성과·유사중복 직업훈련**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효과성 높은 핵심사업 중심으로 재구조화
 - 현장수요·성과가 저조한 직업훈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AI 등 산업전환 신속 대응을 위한 **맞춤형 훈련과정**으로 재설계
 - 직업훈련기관, 고용센터, 지역 기업·산단 등과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채용 유발효과가 높은 내용 중심으로 훈련과정 개편 추진
 - 부처별 AI 인재양성 사업에 대한 유사·중복 사업 정비, 부처 간 연계 강화 및 **통폐합** 등을 통해 사업 효과성 제고

1. 중점 투자방향

- ◇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거점국립대 등 지역대학 전략적 투자 강화
- ◇ 대학의 첨단분야 교육혁신 및 이공계 학생 성장지원 확대
- ◇ 유아 무상교육·보육의 단계적 확대 및 영유아 보육 질 개선
- ◇ 직업계고·전문대, 기초·평생교육, 해외 한국어 교육 지원 확대

□ (지역대학)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전략과 연계하여 거점국립대 등 지역 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 강화

- 거점국립대는 지역의 성장엔진과 연계한 특성화 단과대·연구원* 집중 육성, 교육혁신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

* 대학-기업 공동연구소 설립, 거점대-기업-과기원-출연연-우수대학 등 R&D 플랫폼 구축

- 지방사립대 등은 대학별 강점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성화 및 구조개선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지속
- RISE를 행정체계 개편과 연계하고 성과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 지역 주도의 발전 전략과 연계한 대학 지원 내실화

□ (첨단인재) AI 등 대학의 첨단분야 교육혁신 및 이공계 학생 성장지원

-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AI 거점대학 신설 및 첨단분야에서 대학-기업이 협업하는 산업 수요 중심 교육과정 지원 확대
- 이공계 인재에 대한 학부~박사후 전주기 성장경로 지원* 및 AI 학업장려대출(年 200만원, 취업후 상환) 지원 확대

* (학부) 年 2천만원 등, (박사후) 국내정착 年 6천만원

- 우수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전략산업 분야 중심으로 연구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두뇌한국 21 사업 개편

- (보육) 영유아 특별회계를 통한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강화
 -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26년 4~5세)을 '27년 3세까지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 완화
 -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 여건 조성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강화

- (직업교육) AI·디지털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직업계고 학생의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
 - AID(AI·디지털) 전환 중점 전문대학 육성을 통해 재학생·교직원·성인 학습자 대상 맞춤형 AI 기초 역량 강화 지원
 - 직업계고-전문대-기업 간 통합교육과정 공동 개발을 통해 전문학사 조기 취득 지원 및 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내실화
 - 직업계고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저학년부터 졸업자까지 전주기 직업교육을 단계별로 내실화*
 - * (저학년) 진로·직업 경로 설계, 기초 직무역량 함양, (고학년) 현장실습 참여 확대, (졸업자) 우수 기업과 채용 연계 및 정착 지원 강화

- (기초·평생교육)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 학습기회 보장을 위해 수요 맞춤형으로 중점 지원
 - 계층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학력 보완, 문해교육, AI·디지털 적응 역량 교육 등 투자 확대

- (한국어 보급) 재외국민의 교육기반 강화 및 외국인의 한국어 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한 해외 한국어 보급 강화
 - 재외동포용 교과서 적기 보급, 교육진흥 사업 등을 통해 재외 교육기관의 교육 환경 개선
 - 해외 현지 학교에서 한국어를 채택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어 수업 내실화를 위한 교원 파견 확대

2. 지출혁신 추진계획

- ◇ 유아-초중고-대학 학령인구 변화에 대응한 지출 구조조정 추진
- ◇ 대학 등록금 정책방향, 유사·중복 등 살펴 장학금 지원사업 조정
- ◇ 교육부 평생교육과 노동부 직업훈련 간 추진체계 및 사업 정비

- (인구구조 대응)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재정·기관 구조개선
 - (유아)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 인원 및 투자 규모 조정
 - ※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지원대상을 3세까지 확대하는 데 재투자
 - (초중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개편 및 소규모 학교 혁신 등 지출 효율화 방안 모색
 -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상 사업으로, 한시 지원하던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은 감축 후 일몰 검토
 - (대학) 사립대학 구조개선과 함께 성과 중심 재정지원 및 특성화를 통한 구조개선 유도
- (국가장학금 개편) 그간 등록금 추이 및 대학 재정 여건을 고려,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 전면 개편 추진
 - *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 등 지원
 - 또한 타 부처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를 점검하고, 수혜자 혼란 방지 및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개선 검토
- (평생교육 정비) 저성과 또는 노동부와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조정 및 효율화
 - 심화 직업교육은 노동부 플랫폼을 활용하고, 전문대 등 고등 교육 인프라를 훈련 공급기관으로 적극 연계

3 문화·체육·관광 분야

1. 중점 투자방향

- ◇ 문화산업 고도화, 맞춤형 해외진출 강화 등 K-컬처 세계화
- ◇ 지역볼거리 및 인프라 확대 등 K-관광을 통한 지역살리기
- ◇ 지역예술, 생활체육 등 풀뿌리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적극 뒷받침

- (K-컬처 세계화) 콘텐츠 정책금융 확대 및 AI 기술활용 강화, 맞춤형 해외진출 등을 통해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 수출 경쟁력이 높은 콘텐츠 개발을 위한 중장기 투자를 확대하고, 모든 콘텐츠 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AX 촉진 환경 조성
 - * 정책자금(펀드/융자/보증 등) 수출중심 재편·확대, 콘텐츠 지원 시활용 강화 등
 - 해외 순회전시 확대 및 해외 문화기관 통합서비스 확대, 체계적인 문화분야 인력양성 등을 통해 K-컬처 세계화 촉진
 - 해외박물관·전시관과의 상호교류 기회를 마련하고, 문화원 중심 해외기관 통합 가속화 및 청년들의 K-컬처 해외홍보 기회 확대
 - 국내 대형한류종합행사 규모를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하고, 해외박람회를 국가별 수요에 맞게 개편하여 문화강국 도약 추진
 - * 지역관광과 연계한 국내 「콘텐츠x한류산업」 글로벌 메가이벤트 확대, 해외 대륙별 특성을 감안한 관계부처 합동박람회(+지역관광) 개최
-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 콘텐츠 및 인프라, 홍보 등 모든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지역관광 붐업 및 해외관광객 적극 유치
 -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 콘텐츠 확대 및 인프라 단계적 확충, 국가유산 활용 등을 통해 지역의 관광산업 붐업 유도
 - 지역 내 볼거리 확충을 위한 우수공연·전시 및 인프라* 지원, 지역 고유의 역사성·정체성을 반영한 국가유산 활용 콘텐츠 확대
 - * 거점 문화시설 : 정부에서 지정시 건축비 및 프로그램 일부 지원

- 지자체·민간이 지역특색에 맞는 관광을 주도하는 거버넌스 구축, 지역 숙박 인프라 확충 및 교통·결제 여건 개선
 - 관광두레 및 광역 단위 DMO* 등 지역조직 활성화, 외래관광객 대상 K-통합관광패스(교통, 관광지 입장 등) 확대 운영
 - * 지역관광추진조직(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
- 홍보 체계를 대한민국 중심에서 매력적인 지역 중심 홍보로 전면 전환하여 **국내외 관광객 방문지역 다양화**
 - 관광객들이 수도권을 벗어나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방문하도록 국민체감형 지역관광 유인책 적극 발굴·확대
- **(기초예술 육성) 문화산업 뿌리인 지역의 기초 문화예술 투자를 확대하고, 작은 문화공간인 지역서점의 역할 제고**
 - 지역의 우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지역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하고, **예술인 창작지원** 사업 투자 확대
 - 예술산업 정책금융 확대, 우수 공연에 대한 장르별 스케일업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예술의 산업화 촉진
 - **출판산업 인프라 개선 및 권역별 선도서점 육성** 등을 통해 출판산업 발전 및 지역서점의 작은 문화 사랑방 역할* 강화
 - * 지역서점 물류, 인프라, 독서프로그램 지원 등
- **(생활체육 기반조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 제공, 거주지 근처 체육시설 활용 등 전 국민 보편적 스포츠 기회 보장**
 - 국민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체육포인트 제도 확대·운영 및 공공체육 인프라*** 지속 확충
 - *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 등
 - 유청소년, 장애인, 어르신 등 체육활동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 강화

2. 지출혁신 추진계획

- ◇ 기금 수지여건, 유사중복 사업 점검 등으로 기금 운용 효율성 제고
- ◇ 입장·관람료 등 자체수입 확충 및 보조사업 정비 지속 추진
- ◇ 콘텐츠 산업에 대한 수익공유 제도로 이익공유 강화

- (기금 운용 효율화) 문화·체육·관광기금에 대해 수지여건, 유사중복 사업 등을 종합 점검하여 기금 운용 효율성 제고
 - 다양한 수입원을 기반으로 운영 중인 기금의 수입구조를 개선하여 문화·체육·관광기금의 안정적 운영 여건 마련
 - 기금 간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여 재정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부문 간 융합사업 중심으로 사업 지원 체계 재구조화
- (수입확충·보조사업 정비)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해 자체수입을 적극 발굴·확충하고, 보조사업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
 -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인 박물관 입장료·공능 관람료, 출국납부금 등을 점검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현실화
 - 유사 보조사업 간 보조율 정비 등을 통해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 (이익공유) 성공한 콘텐츠에 대한 수익공유·환류를 통해 더 많은 콘텐츠에 재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사업 지원체계 개편
 - 정부의 지원사업으로 수혜를 입은 기업의 수익을 일부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이와 함께, 공유된 수익은 새로운 콘텐츠 기업 육성, 콘텐츠 제작 등에 재투자하여 콘텐츠 지원사업의 선순환 체계 구축

1. 중점 투자방향

- ◇ 강화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감축투자 지원, 녹색생활 활성화 등 탄소중립 대전환 가속화
 - * '18년 대비 '30년까지 $\Delta 40\%$ (2030 NDC) → '35년까지 $\Delta 53\sim 61\%$ (2035 NDC)
 - ◇ 홍수·가뭄·싱크홀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 ◇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차질없는 배상 지원
-
- (온실가스 감축) 2035 NDC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산업계의 적극적인 감축노력을 촉진
 - 탄소중립·순환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녹색융합클러스터, 산단입주 기업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 등 감축 생태계 확충
 - 철강, 발전 분야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와 글로벌 탄소 무역규제 대응에 대한 지원 강화
 - *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대기업 등)와 수출 대기업 공급망 기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지원
 -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에 효과적·안정적 자금공급을 위하여 녹색 금융을 수요맞춤형 체계로 개편*하고 민간자금을 적극 활용
 - *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지원수단을 차별화하여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 실시,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따른 차등지원을 통해 감축효과 극대화
 - (저탄소사회 전환 기반) 무공해차 이용 등 국민들의 녹색생활을 유도하고, 기후테크 등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탄소중립 저변확대
 - 무공해차 보급 가속화를 위해 보조금·금융패키지(융자·펀드·보험)를 지속 지원하고, 충전편의성 증진을 위해 충전인프라 확충

- 기후테크 기업 육성을 위해 에코 스타트업 등 창업 지원, 판로 개척, 녹색인프라 수출 지원, 기술인재 양성 등 전방위 지원 강화
 - 탄소중립 인식 확산과 국민들의 녹색생활 실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탄소중립포인트 등 인센티브 지급 확대
- (재해 대응) 홍수·가뭄·싱크홀 등 재해로부터 국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확충에 대한 선제적 투자 지속
- 국가하천정비, 대심도 빗물터널 등 홍수 대비 인프라 확충 지원
 - 가뭄 예방을 위한 지하수 저류댐 설치, 비점오염원 관리 등 수질개선을 통한 가용수 확보 투자 확대
 - 싱크홀 방지 등 생활 속 국민안전 제고를 위해 노후하수관로 정비투자를 확대하여 지반침하 사전 예방 도모
-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보전)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 지원
- 차질없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이행(수도권 '26년~, 비수도권 '30년~)을 위한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투자 확대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피해자에 대해 온전히 배상하기 위한 지원 강화
 - 환경오염 취약지역 영향조사 등 환경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등 생활주변 오염물질의 체계적 관리 지원
- (생태계 보호) 훼손된 자연환경 기능 복원 및 체계적 관리 지원
- 수생태계 건강성 제고를 위해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원 및 오염된 토양 정화 지원

2. 지출혁신 추진계획

- ◇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회계·기금 간 사업 조정 등 체계적 자금운영 기반 마련
- ◇ **일몰 기한 설정을 통한 재정지출 절감 및 정책 효과 제고**

- **(기금 운용 효율화)** 기후대응기금의 전략성 강화 등을 위해 체계적인 자금운용 방안 마련
 -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기금 목적 및 용도와의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 정비 또는 타 회계·기금으로의 이관 추진**
 - 유사회계·기금 간 이관 기준 및 사업 정비 가이드라인 마련
 - 2035 NDC 이행계획에 맞춰 탄소중립·녹색성장 핵심 투자 분야 중심으로 기금 내 사업을 재구성하여 **NDC와의 연계성 강화**
 - NDC 핵심재원으로 활용될수 있도록 중장기 집중 투자사업 발굴
- **(조기폐차 지원)** 사업의 **일몰기한**을 설정하여 잔여 사업기간 내 노후차주의 적극참여 유도 및 조기폐차 정책효과 제고
 - *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05~), 4등급('23~)의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지급해 왔으나, 기한이 없어 조기폐차 유도에 일부 한계
 - **5등급 지원사업을 일몰(~'26)시키고 지출효율화분을 탄소감축을 위한 다른 사업으로 재투자하여 2035 NDC 달성에 기여**
 - **4등급 지원사업도 잔여물량, 폐차실수요 및 집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사업기한 설정 검토**

1. 중점 투자방향

- ◇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전략기술 개발 집중 투자
- ◇ 가시적 연구 성과 창출·확산을 위한 임무 중심 투자 체계 구축
- ◇ 연구 현장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과학기술 인재 확보 주력

- (전략기술) 글로벌 기술패권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 (인공지능) ‘AI G3’ 도약을 목표로 초격차 선도기술(AGI, 피지컬 AI) 확보 및 AI 풀스택(AI반도체-클라우드-모델-서비스) 생태계 구축
 - (첨단바이오) AI·데이터 기반 전주기 자동화로 기술개발 속도·성과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미래 플랫폼 기술* 투자 확대
 - * 차세대 신약 모달리티, 바이오 파운드리, 오가노이드 등
 - (양자) 3대 분야(양자 컴퓨팅·통신·센싱) 핵심 원천기술 개발 지속 및 민간 주도 실증·상용화 모델 발굴 병행
 - (반도체) 민간과의 전략적 분업을 통해 화합물·전력반도체, 첨단 패키징 등 고위험·고부가가치 기술개발 주력
 - (에너지) 재생에너지 핵심기술(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 풍력 등) 실증·상용화 및 차세대 원자력 시스템(i-SMR, 핵융합) 투자 지속
- (임무지향) 국가 역량을 결집한 임무 중심 투자 체계 고도화
 - AI 기반으로 과학기술 대도약을 견인하는 「K-문샷 프로젝트」 추진
 - 8대 분야* 중심으로 12개 국가 미션을 발굴하고, 미션별 PD (Program Director)에 권한을 집중하는 책임 관리체계 도입
 - * 첨단바이오, 미래에너지, 피지컬AI, 우주, 소재, 반도체, 양자, AI과학자

- 과기계 출연연의 **임무중심 연구소 전환**(Post-PBS) 가속화
 - '30년까지 소규모 수탁 과제를 기관 미션과 연계된 대형 전략 연구과제로 지속 개편하고, 관련 출연금 지원 확대

□ **(과학인재)** 과학기술 인재의 지속적인 성장·유입 환경 조성

- '인재 양성-유출 방지-해외인재 유치'의 3대 분야 투자 지속
 - **(인재양성)** AI 등 핵심분야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산업계 수요 기반 기업 참여형 교육 확대
 - **(유출방지)** 연구역량이 우수한 신진연구자가 신분 불안정성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 성장경로 지원
 - **(인재유치)** 글로벌 우수인재의 신속한 유치를 위해 전략기술 분야 중심으로 연구지원·정주여건을 결합한 패키지형 지원 강화
- 우수 이공계 인재 성장 롤모델로서 「**국가과학자**」 제도 정립
 - 글로벌 수준의 연구 성과를 보유한 리더급 국가과학자와 함께 차세대 성장을 견인할 **젊은 국가과학자 발굴·선정**

□ **(중소·벤처)** 연구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창업·사업화** 지원 강화

- 4대 과기원을 통한 딥테크 분야 기술창업 지원 확대
- 연구개발 단계부터 기업·투자자 등 잠재적 수요자가 참여하여 시장성을 사전 검증하는 상용화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강화

□ **(국민생활)** 국민 삶과 직결되는 **체감형 연구개발** 투자 확대

- 각종 대형·복합 재난(홍수, 산불 등), 신종 지능형 범죄 등에 대한 첨단기술 기반 쏠주기(예측-복구-사후관리) 대응체계 고도화
- 건강·교통·기상·환경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는 일상 친화형 R&D 지원

2. 지출혁신 추진계획

- ◇ 지출 효율화-전략적 재투자를 연계한 R&D 사업 재구조화 추진
- ◇ 정부 R&D 투자의 경제적 선순환을 위한 성과공유 기반 구축

□ (재구조화) 핵심기술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지출효율화 추진

- 글로벌 기술·산업 트렌드를 반영하여 사업 간 우선순위 조정
- 대내외 여건 변화에 유연한 대응을 위해 기술 유효성 저하 등 시의성이 떨어진 연구는 특별평가 등을 통해 신속히 전환·중단
- 자발적으로 실효성 있는 재구조화 방안을 수립한 R&D 수행 부처에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인센티브 적극 부여

□ (성과공유) 정부 R&D 투자 성과의 국가 경제 환류 기반 구축

- 기업 R&D 지원 시 지분 확보가 가능한 투자형 R&D* 신규 도입
- * (현행) 출연금 방식 → (개선) R&D 지출을 전제로 하는 정부출자 지원 신설

□ (대형R&D) 예타폐지 이후 대형사업* 점검·관리 체계 안착 지원

- * 총사업비 1천억원, 국비 지원액 500억원 이상 사업
- 연구형 사업*은 기획 보완 중심의 신속한 심사로 적시성 확보, 구축형 사업*은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단계별 심사체계** 확립
- * (연구형) 기초·원천연구, 기술사업화, 인력양성 등 (구축형) 연구시설·장비구축 등
- ** 사업추진 심사 → 기본설계 적합성 심사 → 실시설계 적합성 심사

< AI 중점 투자방향 >

- ◇ AI 인프라·인재 등 AI 혁신역량을 고도화하고, 산업·공공서비스 전반의 AX 전환을 가속화
 - ◇ 既 확보된 컴퓨팅 자원과 국산 AI 모델, 데이터의 공동 활용·부처 협업을 통해 투자 효율성 강화
-
- AI 인프라와 인재, 창업, 정책금융, 데이터를 아우르는 전방위 지원을 통해 AI 혁신역량 고도화
 - GPU·국산 AI 반도체 등 컴퓨팅 자원,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등 AI 인프라의 전략적 확충 지원
 - 인재양성, 인재유출 방지, 해외인재 유치 등을 통해 AI 핵심 인재 기반을 강화하고, 전 국민의 AI 활용 역량 제고
 - AI·딥테크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금융과 창업 지원을 연계하여 AI 창업 활성화 지원
 - 산업 전반의 AX와 피지컬 AI 연구·실증 지원을 통해 전통산업의 공정을 혁신하고 공공분야의 AX 전환도 가속화
 - 既 확보 컴퓨팅자원과 AI 모델을 활용하고, 수요 기반 데이터 관리 및 공유를 통해 재정투자 효과성 제고
 - 고성능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 첨단 AI 연구, 국가 프로젝트 등은 정부 구매 GPU 및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우선 활용
 - 각 부처 AX 사업에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우선 적용하여, 국산 AI 서비스의 고도화 및 AI 확산 촉진
 - AI 사업 추진시 데이터 확보 계획을 포함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데이터는 통합 관리·공동 활용을 우선 검토
 - AX 사업은 관계 부처 협의체를 통해 유사·중복을 최소화하고, 부처 간 노하우 공유와 컨설팅 제도화

1. 중점 투자방향

- ◇ 첨단산업 기술 경쟁력 제고 및 지역 주도 성장기반 구축
- ◇ 2030 재생에너지 100GW 달성 등 에너지 친환경 전환 가속화
- ◇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
- ◇ 소상공인 지속성장과 위기극복을 위한 역량 강화

- (첨단산업)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 전환기(AX·GX) 기업 부담 완화
 -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구축 국비 지원 한도 상향 등 첨단산업 중심의 재정지원 강화
 - 로봇·자동차·조선산업 등의 AX 개발·확산을 지원하고, AI 모델링을 위한 고품질 데이터 수집 등 피지컬 AI 산업 기반 강화
- (지방성장거점) 지방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해 권역별 성장 엔진 확충
 - 지역 거점에 앵커기업(대/중견) 유치에 위한 대규모 투자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성장엔진 보조금」 도입 검토
 -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광주-부산-구미) 등 지방 중심 첨단거점 조성 및 비수도권 소부장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투자보조금 지원 강화
- (경제안보) 글로벌 공급망 및 통상 리스크 대응력 강화
 - 석유·나프타·요소 등 주요 자원의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 안정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희토류 등 핵심 광물 비축 확대
 -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유망산업 글로벌 진출 지원, 해외 역지구 활성화 등 전략적 수출 경쟁력 강화

- (재생에너지) '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 등 친환경에너지로 전환 가속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저리용자 및 자가용 태양광 보조 확대
 - 재정 출자 등을 통해 산단 지붕 등 유휴공간에서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자금 조달 지원 추진
 - RE100 산단 적기 조성을 위해 용수·도로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경제적·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망 확충 지원
 - 계통 포화 지역 내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해 ESS 지속 지원

- (창업) 스타트업 열풍 조성을 통한 국가창업시대 개막 적극 뒷받침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지역거점 창업도시 조성 등을 통해 '누구나 어디서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 구축
 - * 단계별 보육·경연을 통해 유망 예비 창업자 선별 후 사업화 자금, 상금 지원
 - 홀로서기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의 빠른 성장을 위해 대·중견·글로벌 기업 협업, 기술 사업화 지원 확대
 - 딥테크 유니콘 육성, 청년 창업 및 재창업자의 재도전 활성화 등 마중물 투자를 위해 모태펀드 출자 및 신·기보 특례보증 지원

-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근본적 경쟁력 강화
 - 지역 기반 로컬 창업가 양성부터 판로까지 초기성장을 뒷받침 하고, AI 교육, 수출 지원 및 디지털화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위기 소상공인의 원스톱 폐업지원을 확대하고, 재취업·재창업을 위한 교육부터 전직 성공수당까지 맞춤형 지원 제공
 - 지역 거점별 대표상권 육성 확산을 통한 상권 활성화 뒷받침

2. 지출혁신 추진계획

- ◇ 수도권 1극 중심을 벗어나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로 개편
- ◇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해 석·연탄 보조금 및 관련 기관 단계적 정비
- ◇ 모태펀드 운용 책임성 제고 및 소상공인 지원체계 효율화

- (지방투자) 지역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기업 투자 지원체계 전환
 -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투자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보조에서 기업 직접 보조 방식으로 개선 추진
 - 수도권에서 멀수록 유리하게 현행 기업 투자보조금 제도 개선
- (에너지전환) 석·연탄 지원 합리화로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전환에 집중
 - 연탄 사용 점진적 축소를 위해 연탄생산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비연탄 난방으로의 전환 지원
 - 조기 폐광에 따라 석탄 채탄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완료한 대한석탄공사의 정리방안 마련
- (벤처투자) 책임성 제고 위해 모태펀드 운용현황 공개 등 투명성 강화
 - 모태펀드 출자 규모, 결성·투자실적, 수익률 등 운용현황 정보를 세분화·확대 공개함으로써 펀드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청산된 자펀드 회수재원에 대한 사전추계·재투자 계획을 마련하여 예산 편성과정에 환류함으로써 자금 운용의 책임성 강화
- (소상공인 지원) 단순 현금성 지원 및 전통시장 유사·중복 지원 개편
 - 효과성·지속성이 낮은 단순 일회성 현금지원보다는, 디지털 전환, 판로개척 등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에 집중 투자
 - 온누리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정책목표·기능중복을 정비하여 전통시장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개편

1. 중점 투자방향

- ◇ 5극 3특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교통혁신 인프라를 확충**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서비스 접근성 제고**
- ◇ 국가 기반시설 노후화 등에 대비한 **예방적 안전투자 확대**
- ◇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SOC 신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

□ (교통인프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 초광역권의 교통 중심축으로서 대도시권과 인근도시를 연결하는 GTX, x-TX 등 **광역·도시철도**의 신속한 개통 지원
- 지방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적기 준공하고, 혼잡도로 개선, 소외지역 국도 확충으로 **도로망 기능 고도화**
- 스마트 신항만 건설을 통한 수출입 경쟁력 제고와 함께 **항만·해운 서비스의 질 제고** 지원

□ (교통서비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서비스 접근성 제고

- **출퇴근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광역 BRT 및 환승센터 등 인프라 지원 확대
- 청년·다자녀·어르신 등 취약계층 및 지방우대 혜택이 강화된 **모두의 카드(K-pass)**를 지속 확대·보급
- **교통약자에 대한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확대 등 지원 강화

- (안전 SOC) 국가 기반시설 노후화 등에 대비한 예방적 안전투자 확대
 - (생활안전)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반탐사, 노후 광역상수관로 개량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기 개보수 지원 확대
 - (교통안전) 주요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 철도 선로 AI 관제 시설 도입, 차량·선로 등 유지보수를 위한 작업자 안전시설 등 지원 강화
 - 국도 결빙취약 구간, 보행자 사고 빈발 구간 등을 중심으로 도로 안전시설 보강
 - 전국 공항 안전시설(방위각시설, 조류탐지레이더, 활주로 이탈방지 장비(EMAS) 등) 개량·확충 사업 지원

- (신산업)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SOC 신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
 - 국민들이 AI를 체감할 수 있도록 AI 인프라 및 서비스가 집약된 AI 특화 시범도시 본격 조성
 - 자율주행 Lv.4 상용화를 위해 실증 시범도시 조성, K-AI 학습 센터 등 데이터 인프라 구축 강화
 - 국산 AI 드론 및 도심항공교통(UAM)의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인프라 구축, R&D, 실증사업 등 투자 확대
 - '35년 NDC 목표 달성을 위해 그린 리모델링 확대, 화물수송 분야에서 철도의 수송분담률 제고 등 지원 강화

- (행정수도) 행정수도 세종의 조기 완성을 차질없이 뒷받침
 - 대통령 세종집무실('29.8월 입주), 국회세종의사당('33년 준공)이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설계 및 조기 착공 지원

2. 지출혁신 추진계획

- ◇ 연례적 집행부진 SOC 건설사업은 **실집행 고려 투자규모 조정**
- ◇ **재원분담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SOC 투자의 책임성 제고
- ◇ SOC 재원을 **적량적소** 지원할 수 있도록 **비용 산정기준 합리화**

□ (집행부진 SOC) 연례적 집행부진 건설사업의 투자규모 조정

- 사업별 공정 및 집행 상황 등 사업여건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연내 실집행이 가능한 소요** 중심으로 지원

□ (재원분담) 중앙-지방-공공-민간 간 재원 분담체계 합리화

- 적자가 지속되는 지방 신공항의 과도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공단 분담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운영 책임성 제고**
- 산업단지 미분양 방지를 위해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방정부 역할 강화
- 투자재원 다각화를 위해 교통수요가 충분한 분야는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고, 출자수입 확대 등 **세입기반도 확충**

□ (사업비 산정) SOC 재원을 적량적소 지원하도록 비용 산정 합리화

- 국도 간선기능에 따른 적정 설계속도 등 **건설비 산정기준 정비**
- 건설엔지니어링 비용 합리화를 위해 사업유형별·규모별 적정 비용 기준 마련 및 **대가기준 상 간접비 산정방식 개선** 추진

1. 중점 투자방향

- ◇ 농어업 생산성 제고 및 K-푸드 수출 활성화 등 경쟁력 강화
- ◇ 신기술 접목·유통단계 효율화를 통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
- ◇ 농수산물 수급 안정과 국민 필수 먹거리 지원
- ◇ 농어민 소득안전망 확충 및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 (경쟁력 강화) 농어업 생산성 제고 및 K-푸드 수출 확대 지원

- 시설·노지 등 농작업을 위한 피지컬 AI기술 개발, AX 핵심데이터 표준화, 로봇 기반 양식 테스트베드 등 첨단·R&D 실증 확대
- 스마트팜·피셔리 전문경영인 양성, 미래혁신성장 펀드 등 자금 지원 강화 등 **스마트 농어업 확산** 지원
- 수출 선도품목 중심으로 수출단지, 스마트장비 등 생산역량 확충 지원하고 수출바우처·용자 지원 등 기업 육성 패키지 확대
- 비관세 장벽 대응 및 현지 사업화 지원 등 **新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SNS, 한류스타 마케팅 등 **K-FOOD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유통 혁신) 신기술 접목, 유통단계 단축 등 통한 유통구조 혁신

- 스마트 산지유통시설(APC·FPC) 등 **물류체계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여 입고·선별·저장·출하 쏠 과정에 단계별 효율성 제고
-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민간 참여자 확대를 통해 기존 도매시장에 대한 경쟁 촉진
- 산지-유통시설-온라인 거래를 잇는 AI 물류관리모델 개발·확산

□ (수급 및 먹거리 안정) 농수산물 수급 안정과 국민 필수 먹거리 지원

- 선제적 식량 수급관리를 위한 전략작물 직불 지원을 확대하고 농안법 개정('26.8월 시행)에 따른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 쌀 수요 저변 확대를 위한 장립종 지원 강화, 김 가공·유통 등 김 산업 지원 지속 추진
-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앱)' 개발 등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기반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 도입**
- 농식품 바우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소비 지원, 초등 1·2학년 과일 간식 등 국정과제 차질 없이 지원

□ (농어촌 삶의 질) 농어민 소득안전망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

-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원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6~'27년: 2년간)** 시행 및 중간 성과평가 추진
- 농어촌 외국인 인력의 안정적 공급 및 수요 농어가와의 매칭을 지원하고 농어업인의 건강권을 위한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
- 생활 인프라 개선, 빈집 정비 등 쾌적하고 살고 싶은 농어촌 정주 여건 조성을 통해 지역 활력 및 인구 유입 촉진
- **청년 농어업인**에 대해 보금자리, 공공 임대농지, 창업 교육, 정착 자금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 농어촌 정착 및 세대 전환 지원
- 농어촌 생활·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AI 선도 모델 개발·도입을 통해 AI 일상화 지원

2. 지출혁신 추진계획

- ◇ 성과 중심으로 농어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편
- ◇ 비축 규모·기간 축소를 통한 양곡 지원 효율화
- ◇ 소득안전망 사업 정비 및 중앙·지방·민간 간 협업 확대

- (정책자금) 성과 중심으로 농어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편
 - 정책 목적을 달성하거나 일정기간 성과가 미흡한 경우, 정책자금 지원을 종료하는 「정책자금 일몰제」 도입
 - 집행이 부진한 단기 운전자금 등을 단계적으로 축소 및 폐지하고 유사·중복 자금은 통폐합 추진
- (양곡관리) 비축 규모·기간 축소를 통한 정부양곡 지원 합리화
 - 정부 양곡은 식량안보를 위한 적정 수준으로 비축 규모 관리 추진
 - 비축 기간은 단축(3년 → 2년)하여 양곡 순환을 활성화
- (소득안전망) 촘촘한 농어촌 소득안정망을 위한 지원체계 정비
 - 기본형 직불, 영농정착지원금 등 기존 현금성 지원사업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 수입안정보험과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기능을 차별화하여 농가 경영안전망은 확충하되 중복 투자는 제거
- (협업 확대) 중앙·지방정부 간 역할 재정립과 민간 참여 강화
 - 산림복원, 가공기술보급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 투자·관리가 필요한 사업은 지방정부 역할 강화를 위해 지원체계 개편
 - 국립해양문화시설(박물관·전시관)은 자체 수익모델 개발을 검토하고 민간 자본 유치 등을 통한 운영효율화 추진

1. 중점 투자방향

- ◇ 자주국방 기반 강화를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최첨단 무기체계 전환, K-방산 생태계 육성 등 중점 투자
 - ◇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한 상비병력 재구조화를 지원하는 한편, 초급간부 및 장병의 복무여건 제고노력 지속 추진
- **(첨단전력 확보)** 병력 감소 추세 및 미래전 양상 대비 최첨단 무기체계 전환을 통한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
 - 재래식 무기의 단순 성능 개량은 지양하고, AI·드론·로봇·유무인 복합체계 등 **최첨단 무기**에 집중 투자
 - 국가 핵심 전력인 핵추진 잠수함 신규 투자
 - 민간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국방무기 개발 및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 등 최신 무기 도입을 위한 **국방 연구개발** 지원 강화
 - **(3축체계 고도화)** 안보 위협에 선제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등 **방위력 강화** 투자 지속 확대
 - 위험 징후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군사위성 등 지휘·정찰 자산 확충 및 고도별 빈틈없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 한국형 고위력 미사일(현무)의 차질 없는 전력화 추진
 - **(방산산업 육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우수 방산 기업을 지속 육성하고, 방산 협력도 강화하여 해외 수출 활성화 지원
 - 초기 진입부터 수출 지원까지 산업 전주기를 단계별로 지속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간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 범정부 차원의 **K-방산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금융 지원

- (병력운영 재구조화) 상비병력을 전투임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비전투 분야 민간 참여 확대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 최첨단 무기체계로의 전환과 연계하여 상비병력은 숙련·장기 복무 중심으로 정예화하고 AI·드론 등 첨단기술 교육·훈련 강화
 - 현역 중심 병력운용을 보완하기 위해 유사시 즉시 전력화가 가능한 상비예비군 운용규모 확대 검토
 - 훈련 참석에 따른 경제적 기회비용 보상을 위해 예비군 훈련비의 단계적 현실화 추진
 - 급식, 조경 등 전투와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분야는 민간 업무위탁을 추진하고, 기존 업무위탁 계약은 성과평가를 통한 제도개선 추진
- (간부처우개선) 초급간부 이탈 방지를 위해 근무여건을 지속 개선하고, 군간부 대상 주거지원 방식도 다양화 추진
 - 초급간부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간부숙소 1인1실 제공 등 주거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
 - 군간부 전세자금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방식 다양화 검토
 - * (기존) 관사(기혼자) → (변경) 간부숙소(미혼자) 추가
- (장병복지 증진) 주거, 급식 등 장병 복무여건을 지속 개선하고, 복무중 장병의 학습·성장 기회도 적극 지원
 - 개별 위생시설이 포함된 4인1실 병영생활관을 지속 확충하고, 병영공간을 휴식·학습·자기개발이 가능한 복합 생활공간으로 재구조화
 - 성능이 개량된 신형 전투피복을 전체 장병에게 확대 보급하고,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해 급식비 단계적 인상 지속 추진
 - 자격증 취득 및 대학 원격강좌 수강 지원, 외부전문가 초빙교육 및 문화예술활동 확대, e북 지원 등 병 자기개발 여건 확충

2. 지출혁신 추진계획

- ◇ 무기획득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및 총사업비 관리 강화
- ◇ 군시설사업 및 군수분야의 투자 효율성 제고

- (무기획득 관리체계 재점검) 방위력 강화 투자 확대와 연계하여 사업 타당성 조사, 총사업비 관리 강화 및 전장 여건에 맞는 소요 최적화 추진
 - 대규모 국방 무기 사업에 대한 사타제도 내실화를 추진하고, 객관적인 무기단가체계 마련 등 총사업비 관리 강화
 - 전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무기획득 사업의 주기적 재검토 추진
- (군시설사업 효율성 제고) 투자 우선순위 등에 대한 점검 강화
 - 군 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안전도, 노후도 등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투자 필요성 및 우선순위 검토
 - 관사, 간부숙소 등 주거시설의 신규 건립 소요를 재점검하고, 주택수당 제도 합리화도 병행 추진
- (군수분야 점검) 군수품 관리 및 무기정비 사업 내실화
 - 군수품의 적정 재고수준을 검토하여 재고 물량을 조정하고, 군수품 단가 산정에 대한 기준도 재정립
 - 외주정비 신규 장기계약 체결시 원가계산 검증을 강화하고, 무기체계 첨단화에 맞춰 군 자체 정비능력 제고 병행 추진

1. 중점 투자방향

- ◇ 전략형 ODA를 통해 AI·문화 등 K-이니셔티브 확산 지원
- ◇ 재외공관 거점공관화 추진 및 국민보호 기능 강화
- ◇ 국민 참여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적극 조성

- (ODA) 국익 연계 상생 전략형 ODA 추진을 통해 K-이니셔티브 확산 및 경제·문화 영토 확장
 - AI·디지털 전환 지원, 공급망 협력 등 수원국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기여하는 전략형 프로젝트 사업 집중 발굴
 - 개도국의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K-컬처 성공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문화 ODA 확대
- (외교) 재외 거점공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 재외공관을 우리 기업 수출·수주 확대를 위한 전진기지로 적극 활용하여 K-방산·푸드·뷰티·컬처 등 전략사업 해외 진출 지원
 - 재외국민보호 인프라 지원을 통해 해외위난 및 사건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차질 없는 대응 체계 구축
- (통일) 대북·통일 인식 제고를 위해 국민 참여형 평화통일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적 통일대화 활성화 지원
 - 기존 안보 중심 주입식 통일교육을 탈피하여 참여형 평화공존·민주시민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 지원
 - 국민의 대북·통일인식 및 정책 참여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 합의에 기반한 사회적 통일 대화 활성화 지원

2. 지출혁신 추진계획

- ◇ 저성과 사업 정비 등을 통해 ODA 내실화 지속 추진
- ◇ 행사·홍보성 사업 정비 및 유사 기능 통합 등 효율화 추진

- (ODA) 기존의 저성과·중복 ODA 계속사업을 지속 정비하고, 국제부담금 지출을 집중 점검
 - 기존 양자 ODA 계속사업의 개발효과성, 국익 기여도 등 성과를 점검하여 저성과·중복사업은 단계적으로 폐지
 - 국제기구 부담금·출연금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부담금 신설·재약정시 사전타당성 검토 강화
- (외교·통일) 각종 유사·중복 사업을 점검·정비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의 중앙·지방간 역할 재조정
 - 국제회의, 포럼, 정책설명회 등 각종 행사·홍보성 사업을 점검하여 유사·중복 사업 정비
 - 문화 활동, 디지털 홍보 등 각종 공공외교 사업에 대해서도 저성과 사업은 효율화 추진
 -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 조직을 일원화하고, 중복된 기능 통합·재편 추진
 - 지역사회에 장기 거주·정착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밀착형 지원 서비스는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추진

1. 중점 투자방향

- ◇ 보이스 피싱·마약 등 초국가·민생범죄 대응을 위한 AI 기반 분석 역량 강화, 국제 공조 강화 및 합동 수사 체계 확립
- ◇ **범죄고위험군**(위기청소년, 정신질환자, 마약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보완 및 범죄피해자 형사절차 전 단계 보호 강화
- ◇ 이상기후 대응 **재해예방 인프라 확충** 및 첨단장비 기반 재난 대응 고도화를 추진하고 빈틈없는 해양 감시체계 구축

- **(민생범죄 대응)** 마약, 보이스 피싱 등 초국가·민생범죄 수사 인프라를 확충하여,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보호
 - 초국가 범죄의 디지털·비대면 특성을 고려하여 대규모 데이터 분석과 이상거래 탐지를 위한 **AI 기반 분석 역량 강화**
 - 수사진 파견 등을 통해 해외도피사범 및 범죄조직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와 검거·송환을 강화하여 **해외 연계범죄 대응력 제고**
- **(재범예방)** 위기청소년·정신질환자·마약범죄자 등 고위험군 집중 관리
 - 보호처분을 받은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기 일상 회복**을 위한 교육·상담·심리치료 등 통합 맞춤형 지원 강화
 - **정신질환 수형자**에 대한 치료·재활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직업훈련 지원 등도 병행 추진
 - 마약 초기 투여자에 대해서는 ‘치료·재활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재범 수형자에 대해서는 교도소내 마약 집중치료

- **(피해자 보호)** 형사절차 전 단계에 걸쳐 **피해자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희생지원 강화로 **경제적 재기** 뒷받침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연계를 강화하여 수사·재판·피해 보상 등 형사절차 전단계에 걸쳐 **피해자 지원의 신속·연속성** 제고
 - 희생·파산·채무조정 등 희생절차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및 온라인 전환을 통해 사기 등 **경제범죄 피해자의 회복 기반** 마련

- **(재해 예방·대응 강화)** 첨단기술·장비를 활용한 대응시스템의 고도화 및 재해예방을 위한 인프라 지속 확충
 - AI·데이터·드론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감시체계를 고도화하여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확대
 - **무인 소방로봇** 도입을 통해 화재 현장 발화점 조사 및 인명 탐색의 정밀성 제고와 소방공무원 위험 노출 최소화
 - 침수·붕괴·해일 등의 복합 재해위험 요인을 마을 단위로 종합정비하는 **풍수해생활권 정비**를 지속 추진하여 지역별 대응 강화

- **(해양 감시체계 구축)** 불법조업 단속 및 분석역량 강화
 - 3천톤급 대형함정, 단속전담함정 도입을 통해 서해 감시·대응 및 불법조업 단속 역량 강화
 - 유관기관 간 위성 정보 공유 활성화 및 분석역량 강화를 통해 빈틈없는 해양 감시체계 구축

2. 지출혁신 추진계획

- ◇ 지자체 사무 지원금 산정체계 합리화 및 재해보험 제도 개편 등 **관행적 예산** 전면 재점검을 통해 지출 구조 효율화
- ◇ **디지털·비대면 전환** 등을 통해 서비스 효율성 제고

- **(지원금 정비, 성과관리 강화)** 지자체 사무 지원금 등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저성과 사업 구조조정 및 유사·중복 지원 정비
 - 총액 방식으로 지급되던 **지방위탁 지원금** 등을 실소요 기반 방식으로 전면 재점검
 - **재난안전사업 평가결과** 환류를 강화하여 성과 저조 사업 등을 축소·개편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단계적으로 정비
 - 치안 환경, 집행 및 정책 효과 등을 종합 분석하여 시의성이 낮거나 정책 효과가 제한적인 사업 정비
 - 행안부·농식품부 간 재해보험 유사·중복 요소를 재검토하여 운영체계를 합리화하고 중복 지원을 방지
- **(디지털·비대면 전환)** 온라인·비대면 강화로 대면·관리비용 절감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의 **온라인·비대면 기능 강화**를 통해 피해자가 언제나 접근가능한 서비스로 전환하고 관리비용 절감
 - 회생 신청부터 채무 조정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고 처리 기간을 공개하여 기간 단축 등 관리비용을 절감

1. 중점 투자방향

- ◇ **통합 지방정부** 안착과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 기반 조성 지원
- ◇ 성장기반 확충 및 취약계층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
- ◇ 공정경제질서 확립 및 사회연대경제 확산 등을 통한 **포용적 사회 통합 기반 공고화**
- ◇ 범정부 AI기반 확산 및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체계 구현**

- **(지방주도 성장)** 실질적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 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인센티브 도입·추진
 - **통합 지방정부**의 성공적 안착과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연 최대 5조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
 - 수도권과의 거리, 지역발전 수준, 인구소멸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역별 재정 우대지원**을 강화
 -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용도를 시설 조성 위주에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여 투자 효과성 제고
- **(성장·민생금융)** 첨단전략산업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성장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정책금융** 지원 확대
 -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기능 강화
 - **대미 관세협상** 결과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방산·원전 등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와 **핵심 전략자원 공급망 확보** 지원

-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안정적·탄력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서민 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 확대
 - **청년미래적금** 지원 확대 및 **햇살론유스**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및 금융 접근성 제고
- **(포용적 사회통합)** 자본시장 질서 확립, 사회연대경제 모델 확산 등을 통해 포용적 사회통합 기반 강화
- 경제질서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신고포상금 기금**을 설치하고, 채무자대리인 확대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강화
 - **국제·국제외수입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을 통해 체납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및 조세정의 실현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우수 지방정부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인센티브를 한시 지원하여 자주재원 확충 노력 유도
 -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과 연구·교육 지원 강화를 통해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복원하고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육성
- **(공공AX)**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의 질적 전환 도모
- 범정부 인공지능(AI) 공통기반을 활용한 행정·민원·법률 등 **분야별 AI 서비스 도입**을 통해 업무 생산성 제고
 - 공공부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개방하여 국민과 기업이 활용 가능한 **AI 서비스 창출 기반 조성**
 - 국민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시스템의 순차적 이중 운영체계 구축, 노후 장비 교체 등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강화

2. 지출혁신 추진계획

- ◇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 및 금융권 사회적 책임 강화
- ◇ 불요불급한 기능·관행적 사업 정비를 통한 재정지출 효율화

- (복권기금 개편) 복권기금 법정배분비율 변경 및 일몰제 도입을 통해 재원배분의 경직성 해소
 - 복권수익금의 35%인 법정배분비율을 35% 이내로 변경하고, 성과평가를 통한 배분액 조정 폭을 20%에서 40%로 확대
 - 관행적 지원을 탈피해, 사업간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 배분이 가능하도록 법정배분제도 일몰제 도입 추진 → 단계적 공익사업 전환
- (금융권 사회적책임 강화)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금융권 기여 확대
 -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 서민금융법 개정을 통해 금융권 출연 상시화 근거를 마련하여 서민금융안정기금의 안정적 운영 지원
- (시스템 유지관리 효율화) 공공 정보시스템의 기능 중복 최소화를 통한 유지관리 비용 절감, 다년도 구축사업 등 점검 강화
 - 공공 정보시스템 활용 현황 조사를 통해 활용도가 낮거나 민간 시스템 활용이 가능한 기능 폐지 검토
 - 시스템 구축 사업의 계획 대비 발주·계약 진행단계, 개발 진척 정도 등 집행상황 관리를 통해 부진사업 연차소요 조정
- (관행적 사업 정비) 각종 행사비·경상비 전면 재검토를 통한 지출 혁신
 - 홍보성·의전성 행사, 실효성 낮은 포상·연수·간담회성 사업, 유사·중복 지원사업을 정밀 분석하여 통·폐합 및 축소